

다문화사회 한국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김 영 린**

요 약

한국은 이주민의 증가와 함께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다인종·다민족과 공존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어떻게 한국사회가 그간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에서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로 변화해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이고도 당면한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모든 민족과 문화가 평등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정책을 말하며, 관련법과 제도를 비롯하여 프로그램 등 실천까지 포함한다. 정부는 국민과 이주민 간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는데,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의 이해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다문화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법, 제도 등 다문화주의 정책이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적 수준에서는 다문화적 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신념·미덕이 필요한데, 즉 다른 민족의 신념과 차이 그 자체를 인정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한국인과 이주민 상호간의 인식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첫째, 국가적 수준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성격을 고찰하고 둘째, 개별적 수준에서 다문화시민의 공존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 이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련한 법의 제한성과 함께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한 서열화된 차별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주민도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법과 제도의 운용과 함께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변화,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했다.

주제어: 다문화사회, 사회통합, 다문화주의정책,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수용성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1-1103-0738). 본 논문은 2012년 6월 1일 한국다문화학회 주최 국제토론회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에서 발표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womyn@sm.ac.kr)

I. 서론

오늘날 세계 64억7천만 명 인구 중 약 3%인 1억9천여만 명이 다른 나라에 체류하고 있다. UN은 “1년 이상의 의도적 체류를 동반한 국제적 이주”를 국제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취업하기 위해 외국으로 이주한 이주노동자도 이주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UN, 2002).

21세기 사람이동은 지구화로 인해 변화된 이주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값싼 운송비용으로 인해 반복적, 주기적 이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주민들은 전자 커뮤니케이션(SNS)으로 모국과 연결되어 있다. 이주의 흐름은 이주민 네트워크로 조직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구직(job-finding) 및 이주는 더 이상 일생에 한번(once-in-a lifetime)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삶의 전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주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으며 사람들은 동시에 두세 개 세계에서, 또는 한 나라 안의 서로 다른 장소를 옮겨가며 삶을 지속할 수 있다. 최근 세계화에 따른 이주는 전반적으로 이주민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문화에 동화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킨다(Hobsbawm, 2011).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아시아 이주민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미국국가정보원(NIC), 2005). 1996년~2000년 아시아지역 전체 해외이주노동자의 40%가 북미가 아닌 아시아 국가로 이동했는데, 1970~80년대만 해도 10%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OECD, 2009).

한국은 2013년 6월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이 150만1천명에 이르러, 2003년 67만 명 이후 10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하였다. 현재 체류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3%로 2020년에는 5%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이러한 이주의 증가는 이주민들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변환을 요구한다.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인종적 민족적으로 인종구성이 다양하게 바뀐다는 것 이상으로 다차

원적 변화를 수반한다. 한국사회의 경우 그동안에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정주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주노동자 중 일부 생산숙련노동자는 앞으로 정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로서 국적을 취득하고 정주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다문화 속에서 다인종·다민족과 공존해야 한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객관적 현실의 변화를 가리킨다. 캐나다의 경우, 1971년 국가가 공식적으로 “캐나다의 모든 민족들과 문화의 평등한 공존과 조화를 지지하는” 다문화주의 정책(multiculturalism policy)을 선포했으며, 1988년 다문화주의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실천하기 위해 1994년 이민부가 행정조직으로 편입되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기에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소수 인종과 민족 집단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 차이를 드러내고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법, 프로그램 등 실천까지 포함한다(윤인진·송영호, 2007).

한국도 이주민의 증가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이 의미 있게 부각된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보고,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문화정책, 다문화가족정책, 결혼이민자정책 등 다양한 명칭 아래 외국인정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즉 정부는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 2004년 국적법개정,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정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 추세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해 다문화의 이해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2007년 발표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경우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로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8조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제19조는 세계인의 날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에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질 높은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참여와 소통 강화 등을 정책목표 및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등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민자인권 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국민과 이민자가 소통하는 글로벌 환경조성” 등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다.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리카(Kymlicka)는 다문화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 국가적 수준에서 법, 제도 등 다문화주의 정책이 운용되어야 하며 개별적 수준에서는 다문화적 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 신념, 미덕, 습관, 성향 또는 이른바 다문화적 스킬을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는다고 해서 호감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며 다른 민족의 신념, 차이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다(Kymlicka, 1995).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주민과 이주민은 서로 다른 문화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가 분명하기에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민과 이주민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상호관계, 소통, 문화적 공유, 사회적 연대 가능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의의 문제로, 이주민의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정주민 쌍방 모두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문화주의 정책이란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의 차이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법, 제도, 프로그램 등으로 보고, 먼저 국가적 수준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개별적 수준에서 다문화시민의 공존과 관련하여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민의 한국사회에 대한 태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2000년 이후 시행된 한국사회에서 정주민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활용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 및 정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다문화사회 · 다문화주의 정책

1. 사회통합과 다문화주의 정책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인종적 · 민족적 ·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을 한 사회에서 제한 없이 평등한 공동체로 진입시키는 과정을 이른다. 이는 사회 내에서 여러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균열을 최소화하고 동질감을 갖게 하며 합리적인 합의절차와 결과에 대한 수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통합은 서로 다른 집단들이 더 큰 하나로 모이는 과정이며,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를 필요로 한다. 사회통합은 동화와는 다른 상호관계, 언어적 소통의 가능성, 문화적 공유의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의의 문제이며, 이주민의 사회문화통합뿐만 아니라 이주국 국민들 쌍방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06; Berry(eds.), 2012). 따라서 사회통합은 사회적 연대와 사회 발전을 근간으로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국가에서 사회적 안정과 충성심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주민과 그들을 수용한 이주국의 상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다. 사회통합정책은 이러한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주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주정책의 목표로서 사회통합 정책은, 1) 다양한 집단의 이질성과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초래될 정치 · 사회적 혼란과 문화적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이주민의 주류문화와의 관계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3) 이를 위한 평등한 기회의 제공과 노동, 주택정책, 그리고 교육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시민권 · 정치권 · 사회권 · 문화권을 누릴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영란, 2007: 1-10; 윤인진, 2006; Joppke, 2012). 이러한 사회통합은 다양한 법과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1960년대 초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이주민과 소수민족들을 이주국에 동화시키거나 주변화하는 의도로서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초기 정책을 포기하고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 turn)로 전환했다(Tolley, 2013). 1990년대 중반 국가에 따라서는 사회통합으로서의 시민통합정책을 다문화주의로 대체하거나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민통합정책의 형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다문화주의 정책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했다. 특히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사회적 연대, 참여, 통합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수준에서는 제도에 영향을 주고, 개인적 수준에서는 정체성, 자기이해,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Kymlicka, 2012).

현대 서구 여러 국가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 정책지표(Multiculturalism Policy Index)를 통해 국가간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지표로는 1) 다문화주의의 제도, 법률 또는 의회결정, 2) 학교커리큘럼에서 다문화주의 채택, 3) 대중매체에서 인종적 대표성/인종인지에 대한 포용, 4) 복장규정(dress code) 면제, 5) 이중시민권 허용, 6)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에스닉집단조직 기금, 7) 모국어교육 또는 이중언어 지원기금, 8) 불이익을 받는 이주민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 8개 지표로 구성된다(Tolley, 2013).

다문화주의 정책을 공표하고 시행하는 국가들은 법과 제도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회통합과 관련한 여러 정책을 채택한다. 인종평등위원회를 만들거나 직업현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어휘를 사용할지에 대한 권장사항을 규정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어 서비스를 하여 자기 언어로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직접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하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이주민 개인이 민족, 문화적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Martiniello, 2007). 즉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기회와 접근성을 제공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는 적어도 법과 제도, 복지 수준에서 어떤 이주민 집단도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착지원서비스와 통합적이고 공평한 복지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문화주의 정책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지출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공공정책으로서 소수집단에 보장된 권리이다. 국가는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라는 현실을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 상이한 여러 영역에서 일련의 공적인 개입을 시행한다. 다문화주의는 재분배의 문제이자 사회정의의 문제가 되므로 국민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2. 다문화주의 정책의 위험성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분야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다문화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사회의 다양성, 인구학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에서는 민족적 혼종성과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삼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간 상호 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굳이 출신문화를 벗고 새로운 문화에 동화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출신문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들이 사회·문화·정치·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원활히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종과 문화, 민족 간의 우열을 배제하지 않는 다문화주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는 데 여러 위험이 따를 수 있다(Martiniello, 2007: 72-93; 이태주·권숙인, 2007).

첫째, 소수집단이 서열화할 수 있다. 정주민들은 이주민을 출신국가의 경제력이나 인종과 민족 등 피부색을 기준으로 서열화할 가능성이 있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한 정주민의 태도가 선진국 문화 중심적일 경우, 문화적 다양성의 강조는 오히려 선진국 지향적이고 문화자본 중심적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차별을 은폐하고 소수민족공동체를 탈정치화하며 분열시킬 수 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축제에서 소수민족 문화는 이국적이며 전통적인 것으로 낙인찍히고 상품화하기 쉽다. 셋째, 소수집단에게 자신의 언

어나 제도를 사용하도록 허용할 경우, 같은 국가에 거주하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 집단과 상호 교류가 적어지거나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나아가 소수집단과 다수집단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도 낮아질 수 있다. 넷째, 이주민 개인은 문화와 정체성, 공동체 안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 다문화주의는 민족과 문화 공동체 사이에 장벽을 가로놓아 이주민이 다수집단, 즉 이주사회에 합류하는 것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주민은 자신의 근원, 문화, 민족 집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국취향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에서 한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인식된다. 그럴 경우 이주민 개인은 문화적으로 다르다고 간주되어 그 나라 국민으로 포섭되기 어려워지는데, 소수집단에 대한 존중은 역설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은폐될 수 있다. 새로운 이주를 통해 노동이 새로이 계층화할 수 있는데, 즉 인종, 젠더, 민족 등이 계급과 중첩될 수 있다. 문화를 사회를 읽는 유일한 열쇠로 삼음으로써 문화·경제·사회의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상황을 지나치게 문화화할 때 이주와 빈곤이라는 새로운 사회문제는 은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내세운 다문화주의 정책이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분리 및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의 고립을 조장할 수 있으며, 문화적 차이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 정책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다양한 이주 집단에 대한 차별철폐와 평등한 권리보장, 소수자권리 강화조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정주민과 이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서로 간의 교차 및 우호적인 사회성을 만드는 다문화성을 고려한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3. 다문화주의 정책관련 법과 제도

19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한국은 이주국가로서 문화, 종교, 종족적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나야 할 도전에

직면해 있다. 현재 이주민과 관련된 법에 대해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이주민들을 어떻게 한국사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가

한국사회는 이주민의 체류유형에 따라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즉 외국인력 가운데 전문기술직, 단순기능직, 그리고 생산숙련직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력과 달리 정주형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빠른 적응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제도,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주민의 모국문화유지 또는 다문화공존과 관련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9조(세계인의 날)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월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날부터 일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에는 “한국인에 대한 다문화시민 이해 및 교육과 관련하여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은 다문화의 이해와 공존보다는 이주민들의 적응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현재 전국 다문화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도서관, 박물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2,928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문화체험 490개(16.7%), 이주민 모국향수 70개(2.4%), 동화 1,578개(58.9%), 상호문화이해 424(14.5%), 한국인대상 문화체험 149개(5.1%), 기타 217개(7.4%) 등으로 나타났다(전경옥 외, 2012b). 따라서 법적

으로는 문화공존, 다양한 문화이해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프로그램 시행에서는 소수에 불과하다.

2) 이주민과 관련한 법 제·개정 및 적용

다문화에 대한 인정만으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지 못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성을 고려한 다양한 공공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즉 민족, 인종, 문화, 종교에 관한 차별의 문제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 특히 법 규정에서 ‘~ 노력해야 한다’가 아니라 ‘~ 필요한 지원을 한다’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엄격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로써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실효성이 있고 적극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Kymlicka, 1995).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시행되는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The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 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이주민의 건강보험의 미적용자 증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및 자녀들의 의료사각지대 등에 대해 지역의료보험의 현실화, 이주민의 건강권 보호 등에 대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3)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되는 산업안전교육의 이해를 의무화해야 한다.

(4) 이주아동의 교육권의 경우,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해 외국인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내학교에 입학, 전학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

제적으로 해당아동이 교육권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의 자녀들, 미등록아동에 대해 원활한 전입학허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정책 및 법과 관련한 주요 정책의 목표는 외국인 인권보호가 아니라 경제활성지원과 인재유치에 두고 있으며 다문화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당위성이 아니라 임의적 규정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Ⅲ.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정책

1. 한국사회에서 이주민 실태 및 특성

한국사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민들이 그 규모와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단일문화, 동질성이라는 사회적 기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수는 1,445,103명으로 2005년 750,000여명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이 가운데 외국인력은 529,690명(36.6%)으로, 전문인력(E1-E7)이 9.5%, 비전문인력(E-9)이 90.5%이다. 대체로 상품과 자본의 이동은 사람의 이동과 연결되며, 고용의 사다리에서 위쪽 계단의 빈자리를 고급전문인력으로 채우거나, 사다리 아래 계단의 빈자리를 값싼 노동력으로 채우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에서 외국인력은 대부분 비전문인력, 즉 단순기능직이며 여기에 생산숙련직이 포함된다. 비전문인력의 출신국적은 베트남(25.5%), 인도네시아(11.4%), 스리랑카(8.8%), 캄보디아(8.1%) 순이다. 그 외에도 산업연수, 기업투자연수, 선원취업 등 단기취업 등이 33,299명(3.5%)이며, 유학(D-2)이 63,815명(6.8%)이다, 결혼이민자는 148,498명으로 2007년 110,362명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이 42.4%, 한국계 중국이 18.1%, 베트남 26.5%, 필리핀 6.5%, 일본 7.9%, 캄보

디아 3.1%, 몽골 1.6%, 태국 1.8%, 기타 10.2%이다. 한국에 온 이주민들의 변화양상 및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류외국인이 증가하고 체류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 체류외국인은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20년 총인구 대비 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체류유형의 경우, 과거에는 단순기능노동자 또는 결혼이주여성 중심으로 이주해왔으나 최근에는 유학, 생산숙련직, 단기취업, 해외동포 그리고 정치적 난민 등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

(2) 이주민들의 출신국가를 보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비전문인력의 경우, 50% 이상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출신이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95% 이상이 중국 및 중국(한국계), 일본,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이다. 반면 전문인력의 경우, 회화지도(E-2), 전문직업(E-5)은 주로 북미계, 유럽계인 반면,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특정활동(E-7)은 아시아계로 중국, 인도, 일본, 태국 등지 출신이다. 2012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그동안은 중국 조선족 출신과의 결혼이 많았으나 2004년 이후 동남아 출신과의 국제결혼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결혼이민자 중 혼인귀화자의 비율은 2007년 13.2%에서 2010년 35.3%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 6월 현재 43.4%의 귀화율을 보이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6). 이와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결혼이주민 자녀 중 초등학교 입학연령(7세)의 어린이는 2011년 1700명에서 2012년 2250명으로 32%가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계 및 필리핀계가 급증하고 있다(조선일보 2012. 5. 8). 동남아 지역 이주민 및 문화와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결혼이주민 자녀들의 증가는 한국사회에서 가시적인 소수인종집단(visible minority)으로 부상하고 있다.

(3) 이주민의 정주기간이 늘고 정주민 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의 평균 거주기간은 5년 이상(평균 64개월)이다.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교체순환원칙을 바탕으로 단순기능인력이 정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3년만 취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취업기간제한은 상대적으로

숙련단절 문제와 함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야기하면서, 2008년 1월부터 숙련생산가능인력과 관련하여 비전문취업(E-9)등 단순 노동체류자격으로 취업한 외국인노동자중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해 특정활동(E-7)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비자유형은 외국인 대기업임원, IT기술자 등 전문직종에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취업기간에 제한이 없고 상대적으로 영주권 취득도 용이하다. 그런데 2013년 현재 현실적으로 전문취업비자를 받은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아직은 그 파급효과는 미미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에 대한 영주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정주화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문화사회인가. 다문화사회는 세 가지로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이주민이 전체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가시적 비중이 증가하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 둘째, 이주민 가족을 형성하면서 출신국별 이주민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들만의 집단적 거주지가 출현하는 다문화사회 전환단계, 셋째, 다문화가족 내에서 성장한 2세가 사회에 진출하고 이주민 공동체가 재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다문화사회 정착단계 등이다(장미혜 · 김혜영 · 정승화 · 김효정, 2008). 이러한 분류기준에서 본다면, 한국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한국에서 정주민과 이주민의 상호인식

법과 제도를 통해 다문화주의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정주민들이 이주민을 보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주민들은 몸만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가지고 이동하며, 따라서 이주는 이주민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혼란스러우며 서로에게 적응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특히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주의 전통에서 비롯된 배타적 정서를 지니고 있어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문화와 생활양식이 정착되지 않음으로써 이주민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2007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는 한국사회에 외국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 단일민족국가의 인종적 우월성 극복 등을 권고했다. 흡스봄은 새로운 이주를 통해 생기는 진정한 어려움은 이민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민에

게 있다고 본다(Hobsbawm, 2011). 정주민 즉 한국인은 이주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논의는 다문화주의 정책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

1) 한국인은 이주민을 어떻게 보는가

이주사회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은 말로는 쉽지만 외부인들에게 문화를 개방해서 자신들의 공간과 부를 나눠 갖기란 결코 쉽지 않다. 문화는 유구한 세월을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단시간 내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특히 각 나라와 민족은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민족적 동질성과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에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민족적 동질성과 우수성 및 공동체 의식을 강조해왔고 다른 문화간 소통 경험이 많지 않아 문화공존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 있다(황정미 · 김이선 · 이명진 · 최현 · 이동주, 2007). 실제로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의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다문화 수용성, 종족적 배제주의 등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의 이주민들에 대한 시각 및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친밀감의 정도를 의미하며, 다양한 민족과 인종에 대해 얼마만큼 사회적 거리를 느끼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로는 황정미 외(2007), 오계택 · 이정환 · 이규용(2007), 정기선 외(2010), 임도경 · 김창숙(2011)등이 있다. 황정미 외의 “한국사회의 다민족 · 다문화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와 관련하여 방문, 국민, 동료, 이웃, 친구, 자식의 배우자, 배우자, 입국금지 등 8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수용 정도를 알아보았다. 외국인집단을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태국, 필리핀, 베트남), 서남아시아(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골인, 새터민, 조선족 등 8개 집단으로 나누어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미국인을 가장 친밀하게 느끼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새터민-조선족-일본인-동남아시아인-중국인-몽골인-서남아시아인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호감도도 미국인-조선족-새터민-중국-서남아시아인 순이며, 영향력의 경우에는 미국인-일본인-동남아시아인-몽골인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배타성과 관련하여 친구, 이웃, 동료로서 외국인을 수용하는 데는 그다지 배타적이지 않으나 국민, 가족, 혈연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관대함이 약해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출신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기선 외(2010)의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한국인들은 미국인을 가장 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뒤로 유럽인-북한이탈주민-중국동포-일본인-동남아시아인- 중국인 순으로 나타났다.

오계택 외(2007)의 연구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에서 나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절친한 친구에 대해서는 중국조선족, 미국인, 일본인에 대한 찬성률이 높는데 비해 동남아인과 중국한족에 대한 찬성률은 낮게 나타난다.

임도경·김창숙(2011)의 “대학생들의 다문화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백인선호사상 특히 서양백인에 대한 호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¹⁾. 우리나라 입국과 관련하여 서양인의 입국허용에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중국, 일본, 동남아, 흑인 등의 입국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직장동료, 이웃, 친구 등에서도 유사한 순위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 집단의 유형별 사회적 거리감은 이민자 자녀, 서양인(백인),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일본인, 흑인, 한국계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중국인, 외국인 근로자 순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1) 다문화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해 인종별, 유형별 분류, 인종/국적별 분류는 중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 서양인(백인) 서양인(흑인),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이주민자녀, 한국계 중국인 등으로 분류했다.

(2) 다문화 수용성

황정미 외 연구(2007)에 의하면, 다문화사회에 대한 태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공존의 긍정성’에 대해 찬성이 61.3%, ‘다양성 확대는 국가경쟁력에 기여’ 55.3%,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우리 문화 풍부’ 40.1%, ‘다문화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응답이 48.4%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의 연구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 국제지표비교에서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문화공존’에 대해 유럽 18개국은 찬성비율이 74%인 데 비해 한국은 36%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지수 측정결과, 한국인은 다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및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의 경우, 미국이 가장 높고(19.5%) 일본(18.6%)과 중국(18.4%)이 유사한 수준이며 동남아(16.8%)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낮았다. 그리고 언어, 대중문화, 공연과 문화예술은 국가별, 지역별로 관심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데, 미국-일본-중국-동남아순으로 관심의 위계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세대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20대는 대체로 외국문화에 대해 개방적이나 관심은 선진국문화에 치우쳐 있으며 세계화에 대한 균형 감각이나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이주민의 출신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종족 배제주의

종족 배제주의는 주류사회가 외국인집단인 이주민에게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외부위협과 인지적 위협으로 나뉜다. 즉 주류사회가 이주민에게 느끼는 위협의식은 권력과 자원, 이익과 보상을 위한 집단 간 경쟁과 갈등,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위협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외국인 이주민들과 비슷한 조건에서 일자리나 생업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위협의식은 인종주의, 상징적 인종주의, 권위주의적 성향, 편견, 보수적 성향과 맞물려 이주민에 대한 배타적이고 불관용적인 태도, 차별과 편견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 결과 주류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외부위협과는 달리 인지된 위협은 직접 외국인 이주민들과 경쟁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의 존재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해질 거라고 느끼는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황정미 외, 2007; 윤인진 · 송영호, 2007).

황정미 외 연구(2007)에 의하면, 현실적 위협의 경우, 이주민과 정주자 간의 경제적 이익의 대립이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고 일자리나 생활공간도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대립은 아직 한국인들이 체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종족적 배제주의 태도는 5점 척도를 기준으로 평균 2.85로 중립적 입장에서 약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나 그다지 동조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인진 · 송영호(2011)의 연구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관련 태도의 비교분석”에 의하면, 합법적인 체류이주 노동자가 한국사회에 불이익 또는 위협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범죄, 주거지 환경 악화 등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계택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사회 근로자 중 98.8%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반대한 경험이 없으며, 75.5%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93.2%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은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임도경 · 김창숙(201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외국인 혐오나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의 전체평균이 부정적인 인식으로 치우쳐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공포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근접한 공간에서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2) 흡스봄은 오늘날 민족주의 내 외국인혐오증이라는 요소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 원인은 그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으로 위협한 요인이라고 본다(Hobsbawm, 2011).

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위의 연구결과를 볼 때, 한국인은 미국과 서유럽의 문화와 백인들에게는 개방적이며 비서구문화와 비백인에게는 폐쇄적이라는 외국인에 대한 이중시선과 함께 유색인종 및 문화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2) 이주민은 한국인/한국사회를 어떻게 보는가

이주사회에서 이주국에 대한 이주민의 소속감과 참여도가 높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갈등을 빚지 않고 더불어 살아가기는 어렵다. 다문화주의 정책이 이주민을 이주국에 결속시킬 수 있는 사회적 접착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이주국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사회에 편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주사회와 관련하여 외부의 시선이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적절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1) 이주민은 한국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에 대한 임도경(2010)의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 연구”에서 이주민들이 보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이주민을 세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첫째, 친한국형은 미국 백인, 우즈베키스탄 백인, 미국인 백인혼혈, 러시아 백인 등 이주민들 가운데 미국, 미국계 혼혈, 유럽 등 백인들이 주축을 이룬다. 이들은 한국에 대해 한국은 안전하고 선진국이라고 보며, 다시 방문하거나 살고 싶은 곳, 한국은 예의바르고 정이 많고 부지런하고 끈질긴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인의 인종차별적 시선 즉 백인한테는 호의적이나 특정민족에 대해서 노골적인 비호감을 표시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인종적 편견문제를 우려했다. 이렇듯 친한국형이 거론한 한국인의 인종적 편견 문제는 한국인에게 호의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반한국형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둘째, 반한국형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계 유색인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면 돈 벌 기회가 많은 나라도 아

니고 안전하지도 않으며 자기 것만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닫힌 사람들, 그리고 백인에게는 호감을 많이 갖고 있으나 다른 유색인들은 인종차별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국인은 미국사람만 좋아하며 국산이 최고이며 한국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등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 문화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보고 있다. 셋째, 한국 우호형으로 조선족동포 등은 긍정적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옥 외의 연구(2012a)에 의하면 재한외국인중 전문기술취업자와 비전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에서 차별경험 및 진입장벽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주로 후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 다른 문화를 진입장벽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후자의 경우 주로 아시아지역에서 이주한 노동자들로 아시아지역 내에서도 동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에서 온 이주자들이 다른 지역(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러시아)에서 온 이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다른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진입장벽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이주민은 한국을 어떤 사회로 보는가

첫째, 이주민이 보는 한국사회는 이주민을 차별하는 사회이다. 한건수·설동훈(2007)의 연구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에 의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직장에서의 차별대우(35.2%), 욕설이나 모욕(33.6%) 등 차별을 경험했다. 이해경(2009)의 연구 “혼인이주와 혼인이주 가정의 문제와 대응”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36.4%가 차별을 경험했는데, 주로 동네(40.2%), 상점, 은행 등(36.1%), 공공기관(25.6%), 집주인 등(20.2%), 직장(62.5%)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이에 대해 차별시정 요구를 한 경우가 35.2%였다. 홍기원(2008)의 연구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가족) 차별에 대한 인식은 ‘조금 심하다’가 53.3%로 가장 많았고,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이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사람

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가 46.4%, ‘다문화사회가 되기 위해서 더 배려해야 한다’가 38.1%, ‘약간의 차별은 어쩔 수 없다’가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 동훈(2010)의 연구 “국내거주 영주권자 실태조사 및 사회통합도 측정”에서 한국생활에 힘든 점으로 편견과 차별대우 26.8%, 언어문제 14.2%, 문화차이 10.1%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편입하는 데 있어 어떤 장벽이 있다고 보는가? 전경옥 외 8인(2011)의 연구 “재한외국인 사회통합지표 및 지수측정”에서 전문기술직 및 재외동포는 한국사회 편입 장벽으로 다른 종교 10.9%, 말투, 액센트 31.4%, 다른 언어 38.2%, 다른 피부색 21.8%, 다른 인종 24.5%, 다른 문화 35.2%, 다른 민족 29.7% 등으로 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여러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이주민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아직까지 동화주의에 가깝다. 특히 동남아시아계의 이주민들에게 인종적 배타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이주민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이주민 서비스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 사이에 뿌리박힌 인종차별의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건수 외 연구(2007)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은 사회통합의 선결조건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한국인의 인식전환(36.2%)’,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해소(27.6%)’ 등을 들고 있다.

(3)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 편입할 의지가 있는가

갤브레이스(Galbraith)는 이주민들이 이주사회에 편입하는 데 동일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즉 이주민들의 개인차 또는 이주 전 본국에서의 사회적 위치를 강조한다. 이주민들은 고급인력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대부분 단순기능직, 서비스직에 종사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이주사회에서 자신의 학력, 직업보다 훨씬 낮은 직업을 갖게 될 경우는 다른 계층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하층계급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은 이주국에서 힘들어도 본국에

서의 힘든 생활에 비하면 현재의 삶이 개선되었거나 나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려고 노력한다(Galbraith, 1993). 베리(Berry)는 이주국이 이주민들을 사회통합하는 데 몇 가지 유형, 즉 차별-배제, 동화, 다문화 모형이 있듯 이주민들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다양한 유형이 있고 본다(Berry, 1997 : 3-4).

홉스봄에 의하면 20세기 말 이후의 이주는 이전시기의 이민과 실제로 아주 다르다고 보았는데, 몸은 이주해 왔으나 출신국의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Hobsbawm, 2011). 모국이란 주로 영토로 규정되지만 공통관습과 전통, 공통언어와 민속 및 종교에 의해 규정되기도 한다. 정보혁명으로 고국의 상황, 연락,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활동까지 같이할 수 있다. 이러한 동포간의 교류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문화는 더 이상 지리적 여건에 구속되지 않고 영토를 초월해 쉽게 이동할 수 있다(Rifkin, 2005).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도 한국사회 편입에 대해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첫째,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이주민 가운데 전문기술직은 56.7%가, 비전문기술직 및 방문취업은 68.1%가 ‘계획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국국적을 유지하는 이유로 전문기술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24.4%, 경제사회적으로 유리해서 27.7%, 한국국적을 갖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이 없어서 33.7% 등으로 답하고 있다. 비전문기술직 및 방문취업은 ‘본국에서 살 계획이기 때문에’가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에서의 소속감은 전문기술직의 경우, 내가 사는 동네(61.8%), 지역(63.6%), 본국(85.8%) 등으로 나타났으며, 비전문기술직 및 방문취업의 경우, 내가 사는 동네는 64.2%, 지역은 63.0%, 본국은 89.5%로 소속감을 나타냈다(전경옥 외, 2011; 2012a). 셋째, 지역사회 참여도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지역주민모임에는 72.2%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정도는 34.1%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정, 2009). 넷째, 자국문화 접촉을 보면 전문기술직의 경우(비전문기술직 및 방문취업), 모국관련 신문이나 책, 잡지는 75.1%(30.6%), 모국관련 영화, 드라마, 음악은 88.9%(37.0%), 모국과의 전화는

88.9%(52.7%), 인터넷을 통해 자국의 근황이나 소식 듣기는 89.8%(55.0%), 모국 음식은 78.0%(48.0%), 모국에 있는 동료와 친구소식은 89.2%(4.6%)가 일주일에 3번 이상 경험하거나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옥 외, 2011: 2012a).

IV. 결론 :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

한국에서 정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거주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존을 위한 과제는 다양해질 수 있다. 즉 임시체류를 목적으로 하거나 거주역사가 짧은 외국인들은 정치적, 제도적 권리확보를 요구하기보다는 당장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절실하다. 그러나 거주가 장기화 되고 2세가 태어나거나 정주를 계획하게 되면서 보다 나은 직업, 교육, 의료, 사회보장, 정치적 권리 등을 둘러싼 시민적 권리확보와 제도적 차별반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 다른 이민국가에서 경험한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인들도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의 변화, 외국인 이주민 지원정책의 필요성 등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정체감, 인종차별, 편견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다양성 수용에는 한계를 보이며, 이주민들 역시 한국인의 시선과 의식을 인지하고 있다. 이주민들도 한국인들의 출신국 및 피부색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 및 차별 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등 유색인종은 한국에 대해 인종차별을 하는 사회로 보고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인식은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는 다문화주의 정책 관련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특히 다문화주의 정책으로서의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리고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등은 문화다양성, 문화공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아직은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에 근거한 제2차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에서 경제활성지원과 인재유치를 우선적인 과제로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주민 및 그 자녀는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인과 이주민의 공존보다는 이주민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다문화주의 정책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거나 법 규정에서 있어 ‘필요한 지원을 한다’보다는 ‘~ 노력해야 한다’로 명시하여 당위성이 아닌 명목상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이주민지원정책에서 다문화 공존을 위한 내용은 정치적 수사에 머물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문화공존을 위한 법, 제도 등 국가수준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천과 함께 정주민과 이주민 쌍방 간의 다문화적 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과 함께 다른 민족의 신념,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현실화하여 다문화 공존을 위한 실효성이 있고 적극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민뿐만 아니라 정주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인이 보여주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국민정체성, 다문화수용성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의 불편한 삶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제도에서 정주민의 의식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앞선 이주국가들이 이주로 인한 갈등, 불안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 다문화주의 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이중 시선에서 벗어나 이주민과의 상호공존으로 수렴하도록 시민 다문화주의 협력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즉 법과 제도를 통한 위로부터의 다문화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다문화운동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변화,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 확산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주민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주도적인 역할과 파트너십 즉 거버넌스 형태의 다문화주의 정책모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그리고 산업구조의 재편, 생애주기의 변화 등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이주로 인한 다인종·다민족·다문화사회로서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하위직의 이주노동자화), 가족의 변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있으며, 이주민을 대상이 아닌 정주민과 함께 공동주체로 보는 사회적 변환(social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

2013년 4월 12일 접수
2013년 6월 4일 수정 완료
2013년 6월 10일 게재 확정

참고문헌

- 갈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 1993. 『만족의 문화』. 이상영 역. 동아일보사.
- 김영란. 2007. “글로벌 인적이동과 사회통합 문제.” 『다문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 리프킨(Jeremy Rifkin). 2005. 『유러피안 드림』. 이원기 역. 민음사.
- 마르티니엘로(Marco Martiniello). 2007.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 다르게, 평등하게 살기』. 윤진 역. 한울아카데미.
- 미국국가정보원(NIC). 2005. “2020년 미래 세계예측.” www.cia.gov/nic.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출입국통계연보』. www.immigration.go.kr(검색일: 2013. 4. 5).
- _____.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오계택·이정환·이규용. 2007. 『이주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
- 윤인진. 2006.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 북한이주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7(1): 41-92.
- 윤인진·송영호. 2007. “한국인의 소수자 및 다문화 관련 태도의 비교분석.”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춘천, 강원대학교. 2007년 12월 14~15일.
- 이태주·권숙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 진전에 있어서의 사회갈등양상과 극복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임도경. 2010. “외국인 이주민이 본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연구.” 『주관성연구』 20: 102-120.
- 임도경·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1): 1-29.

- 장미혜 · 김혜영 · 정승화 · 김효정. 2008. 『다민족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경옥 · 김영란 · 김혜영 · 윤광일. 2012a.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측정: MIPEX에 의한 사회통합도측정 및 재한외국인 실태조사 (E-9/H-2)』.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전경옥 · 김영란 · 홍기원 · 설진배 · 김연화. 2012b. 『문화예술훈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연구』. 문화관광체육부.
- 전경옥 · 양기호 · 이유진 · 유숙란 · 김영란 · 김혜영 · 윤광일 · 이유진 · 오경희. 2011.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지표 및 지수측정』.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 정기선 · 이선미 · 김석호 · 이상림 · 박성일. 2010.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이민관련 태도연구』. IOM이민정책연구원.
- 한건수 · 설동훈. 2007. 『이주자가 본 한국의 정책과 제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홉스바움(Eric Hobsbawm). 2011. “혼란스러운 세계 - 에릭 홉스봄과의 대담.”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 케네스 포머린츠(Kenneth Pomeranz) 외 지음. 공원국 · 안효상 · 김성호 외 역. 『뉴레프트 리뷰 3』. 길. pp. 341-369.
- 홍기원. 2008. 『이주민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황정미 · 김이선 · 이명진 · 최현 · 이동주. 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 · 다문화 지향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erry, J.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34.
- Berry, J(eds.). 2012. *Cross-Cultur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ppke, C. 2012. "Immigrant Integration after Multiculturalism." 한국국제교
류재단 주최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 2012.11.30.
- _____. 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Oxford Political Theory*. Oxford,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University Press.
- Kymlicka, W. 2012. "Multiculturalism: success, failure, and the future." 한
국국제교류재단 주최 <다문화주의, 동·서 석학에게 묻다>. 2012.11.30.
- OECD. 2006. *From Immigration to Integration*.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_____. 2009. "국제이주: 인간중심의 세계화." [www. oecd.org/insights](http://www.oecd.org/insights).
- Tolley, E. 2013. "Multiculturalism Policy Index: Immigrant Minority
Policies." www.queensu.ca/mcp. (검색일 : 2013. 3.7)

The Social Integration and the Multiculturalism Policy of Multicultural Society Korea

Kim Young L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As the number of immigrants are increasing, Korea should co-exist with various races and nations, even though it has never experienced such a situation before. The multiculturalism policy is the policy which supports the equal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of all races and cultures, and it includes laws, institutes, programs and practices etc. The government has set up the law and the system for the integration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especially Framework Act on Treatment of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show that its major objective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e.

The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Korean multiculturalism policies and mutual awareness between Koreans and immigrants as well. On its basis, it tries to grope for the direction of the multiculturalism policy. The study, above all, grasps the character of the laws and institutes as the multiculturalism policy on the national level. It also analyzes Korean's recognition of immigrants and immigrant's recognition of Korean society regarding multicultural citizen's coexistence on the individual lev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multiculturalism policy-related law is quite limited, in addition, Koreans have their segregated attitude toward the immigrants and this leads for the immigrants to have a negative associations related to Korean society. The study, accordingly, suggests that the multiculturalism policy should adequately be involved in both a law and a system, Korean's recognition of the immigrants should change, and the public discourse of the multiculturalism should spread extensively.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ism policy,
Social dista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